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전남형 만원주택' 고흥서 착공

총사업비 180억 투입 50세대…2027년까지 순차 입주 출산・양육 부담 완화…지역 정착・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도의 혁신적 주거복지 모델인 '전남 형 만원주택'이 진도에 이어 고흥에서도 본격 추진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 적 주거 환경을 제공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는 13일 고흥군 고흥읍 성산리 전 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고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 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장, 송형곤・박

흥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임 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으로,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 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 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사업이다.

이번에 첫 삽을 뜬 전남형 만원주택(고 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 미래를 이끌어갈

선준 전남도의원, 청년, 신혼부부 대표, 고 흥)은 15층 1개 동, 총 50세대(청년 26세 대, 신혼부부 24세대)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전남도가 주택 건축비 150억원을, 고흥군이 주차장 등 시설 조성에 30억원을

특히 취미 생활과 출산・양육에 불편함 이 없도록 주택 면적도 청년 25평형, 신혼 부부 33평형 등 넓은 공간으로 설계됐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꿈과 희망이 시작 되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AI데이터센터와 우주발사 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걱 정 없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아이를 낳 아 기를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귀농어・귀촌인들이 주거 걱정 없

우주항공 중심도시"라며 "전남형 만원주 이 고흥에 터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이 고흥과 전남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 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남도는 진도와 고흥에 이어 내년에는 신안과 보성에서도 순차적으로 만원주택 착공을 추진하며, 2026년 7월 이후 진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10세대 입주가 완 료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주시의회, 혈세로 용역 발주하고도 '잠잠' 환경단체 등 반발 여론에 후속 논의는 이어가지 못해

광주시의회가 국립공원 무등산에 케이 블카 설치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 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시의회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이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됐다. 확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후속 논의 는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 난해 말 의원 정책 연구비를 투입해 민간 용역회사에 '무등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증심사 입구 인근-무등산 장불재 (4.8km), 2안 지산유원지-무등산 장불재(6km) 등 으로 압축됐다.

1안은 무등산 관광 인프라인 증심사와 연계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의하고 환경 훼손이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화재 으로 전해졌다.

2안은 더 긴 구간을 조성해 풍경 감상이 가능하고 지산유원지 활성화 가능성이 장 점으로 꼽혔지만, 구간이 늘어난 만큼 환 경훼손 우려를 키우고 설치 비용이 늘어난 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는 케이블카를 설 치할 경우 연간 약 52만명이 방문할 것으 용역 결과, 무등산 테이블카 조성은 1안 로 예상돼 입장 수익을 94억원 가량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성사업비(1안 720억원, 2안 900억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등을 토대로 30년 운영 기간을 기준으

로 분석한 경제성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 (B/C) 이 1안 1.43, 2안 1.16으로 모두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말 진행돼 올해 초 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나, 광주시의회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 에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마을만들기를 주로 하는 민간용역회 사에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 립을 맡긴 데다 노선 선정 배경과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무등산 케이블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맞서고 있어서 정책 판 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기 위해 용역을 진 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 타당성이 높게 나왔으나 환경 단체 등 반발 여론에 후속 논의를 이어가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추억의 동화'가 있는 '광주 충장축제'로 오세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 이틀을 앞둔 13일 오전 광주 동구 신서석로 빛의읍성 일원에 조성된 충장축제 테마의 거리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충장축제 추억유랑단'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열리 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충장로와 금남로일원에서 열린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싸람화토씨 그리고 저연현경 오늘과 미테를 생각합니다. 주교 시랑 받는 기일이 되겠습니다.





보 사 1공장)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LS)로 172 한림휴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

"대선개입" · "이석해야" · · · 국감 첫날 여야 조희대 공방

기재위선 "경제 대반전"·"참담한 F학점" 평가 엇갈려 안규백 "12·3계엄 내란 아니면 뭔가…5200만이 목격"

정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질 의 여부, 한미관세협상, 12·3 비상계엄 에 대한 내란 규정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더 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 대로 기관장으로 출석했을 뿐이라며 이 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사위 원장의 의사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대 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 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 해 해명을 요구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 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 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 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

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 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 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 하나"라고 반문했다

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 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 게)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 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 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

>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 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 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 검은색 옷을 입은 나경원 의원은 "민 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림공 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 며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 없이 민 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답 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 고 비판했다.

>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 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 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

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 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 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 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 부 출범 이후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 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 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됐 다.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자문기구 명칭에 '내 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규백 국방 부 장관은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 은 5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 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걸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내란이라고 이성오 기자

송승종 전 사무총장, 민주 정책위 부의장 임명 광주시 40년 행정 경험으로 '지역발전·생활정책' 마련

송승종 전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 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명 예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역할이 주어지 며, 송 부의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생활 정 책과 지역 현안을 직접 다루게 된다.

송 부의장은 "정책은 현장에서 태어나 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정책 위 부의장으로서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생 활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조직에서 정책 할 전망이다.



및 조직관리 분야 공로 를 인정받아 '1급 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선대 본부 내 정책 조정 및

실행 파트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험은 향후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정책 실행력과 조직 조정 능력을 겸비한 후보로서의 강점으로 작용 장승기 기자 sky@